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 심포지엄

일 시 : 2006. 2. 23(목), 14:00 ~ 17:00

장 소 : 공주대학교 본부 대회의실(3층)

주최·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후 원 : 공주대학교

◆ 진행 순서 ◆

개 회 식 (14:00 ~ 14:20)

- 국 민 의 례
- 개 회 사 김 용 웅 충남발전연구원장
- 축 사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 축 사 이 춘 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제 발표 (14:20 ~ 15:30)

- 좌 장 이 태 일 국토도시연구원장
- 제1주제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임재영 ·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주제 발표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이 선 하 공주대학교 교수
- 제3주제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 환 영 공주대학교 교수

휴 식 (15:30 ~ 15:40)

종 합 토 론 (15:40 ~ 17:00)

- 좌 장 이 태 일 국토도시연구원장
- 토 론 자 김 명 수 한밭대학교 교수
- 김 성 길 공주대학교 교수
- 이 상 호 한밭대학교 교수
- 조 판 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폐회 (17:00)

목 차

□ 제1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I. 서론	3
II.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및 관련연구 고찰	5
III. 모형	14
IV. 분석	24
V. 결론	40
참고문헌	44

□ 제2주제 :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I. 서론	47
II.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및 건설방향	49
III.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고려한 국토전략 방향	54
IV. 행정도시와 연계한 충남 발전전략	57
V. 충남 발전방향을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방안	60
VI. 결론	66

□ 제3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I. 서론	69
II.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71
III.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방안	72
IV.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76
V. 충청권 지역현황	79
VI. 충남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 방안과 네트워크 방안	83
참고문헌	91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임재영 ·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이 선 하

(공주대학교 교수)

제3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 환 영

(공주대학교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I. 서론

- 참여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화와 세계화 전략으로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각 지역들의 역동적 발전 계기를 조성하여 국가혁신과 국토개조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있어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임
 - 이용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는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역의 잠재능력과 국가역량을 극대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의 성격상, 향후 발생되는 지역경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됨
 - 먼저 첫 단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및 이의 경제효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짐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향이 결정되며, 다음 제 2 단계에서는 분석 모형이 설정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분석됨
 -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결과가 요약 및 종합됨

II.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및 관련 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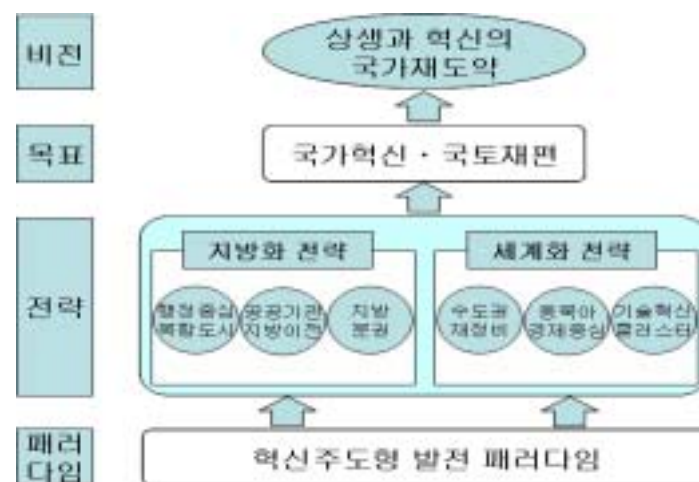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요

- 정부정책이나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의 기본방향은 제시되기 때문임(김홍배 2003)
- 여기서는 주로 신행정수도연구단(2003)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2005a,b 등)와 행정자치부 고시자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짐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의의 및 정의

- 과거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부산물로 나타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이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경제력 및 인구 집중으로 혼잡(congestion)과 환경오염, 주택난, 지가상승, 난개발의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이 2001년 기준으로 연 10.5조원이, 그리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신행정수도연구단 2003)

- 정부의 대책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억제'와 '인위적인 시설위주의 규제정책'에 국한되었다고 평가됨
- 다시 말해, 그동안의 수도권 정책은 非수도권을 발전시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데 치중한 소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와 체계적인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일관성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innovation-driven paradigm)에 기초해서 국가 및 국토운영의 틀을 개혁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 달성의 전기로 삼고자 하고 있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을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중 지방화 전략의 핵심과제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은 수도권 지역은 과밀해소와 경쟁력 증진을 통해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은 역동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005).

[그림 1]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의미로 요약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② 수도권에서 중남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③ 수도권의 재정비

-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은 과밀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특히 서울의 경우 계획적 관리를 통한 세계일류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Hub)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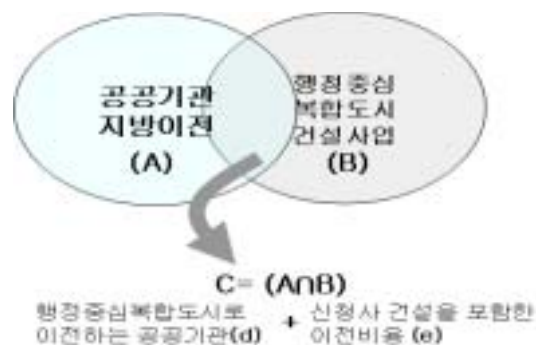
- 또한 지방의 경우 행정중심지로의 전환(충청남도)과 함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자 함

- 즉, 전국이 상생(win-win)하는 국토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자 함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이전과 물리적 개발사업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임

-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중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 행정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규모가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 도시에 부여될 복합기능의 규모 역시 결정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d)이 포함됨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정의

-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됨
- 단, 수도권 재정비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생략함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내용: 사업비 및 공공기관 이전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기존 도시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인구 30만~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립형 신도시를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의 2,212만평에 건설하는 사업임([그림 3] 참조)
- 또한 이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005).

[그림 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예정지

- 2006년 1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개발사업의 규모 및 이에 따른 개발비용 등의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2003)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기본구상안에 제시된 건설비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30만~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2,212만평의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시의 수용인구 50만명과 개발면적 2,291만평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임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은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이 총 45조 6,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항목	비용(억원)	비고
총사업비	456,130	
I. 도시기반조성비		
1. 용지매입비	132,579	
2. 조성비	38,399	
3. 직접경비(인건비 등)	82,218	
4. 간접경비(금융비용 등)	1,930	(용지매입비+조성비)×1.6%
5. 일반관리비(부수적 경비)	7,210	(용지매입비+조성비)×8%
	2,823	(용지매입비+조성비)×5%
II. 광역교통기반시설	26,860	
III. 건축비		
1. 공공건축	255,224	
2. 민간건축	45,023	
	210,201	
IV. 예비비	41,466	(I + II + III)×10%

- * : 신행정수도 연구원(2003).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규모(2005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 고시자료)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규모

구분	이 전 기 관		이전인원
중앙 행정 기관	12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10,374명
	4처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2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기타 공공 기관*	18개 국책 연구원	경제사회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588명
합계	-		11,962명

- * : 기타공공기관의 이전규모는 충남발전연구원(2005)의 자료를 적용함. 단, 여기서 개별
이전 6개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일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2012	...	2030
준비 단계	입지선정										
	예정지역 · 주변지역 지정										
계획 단계	도시개념 국제공모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단계별)										
토지 매입	토지 및 건축물 조사										
	감정평가										
	토지매입										
건설 단계	도시기반조성 (단계적 개발)										
	청사건축										
	주택, 사업빌딩 등 민간건축										
이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변입주										

-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개발사업 비용과 추진일정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차별 개발사업비용은 추산됨
-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이동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단, 여기서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음

2. 관련 연구동향

-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함(<표 4> 참조)
 -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짐
 - 이 중 충남발전연구원(2005)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를 분석한 사례들임
 -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방법론 상, 김의준(2003)과 전명진·허재완(2003)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투입산출(input-output, IO) 모형을 적용함¹⁾
- IO 모형이나 CGE 모형은 모두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들간의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들임

1) IO 모형의 경우 전국모형과 지역모형으로 구분되며, 지역모형의 경우 역시 단일지역모형과 다지역모형(many-region IO model)으로 구분된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가이다.

- IO 모형이 수요중심의 부분균형모형체계(partial equilibrium model framework)인 반면, CGE 모형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모형체계(general equilibrium model framework)이므로 개발사업의 효과를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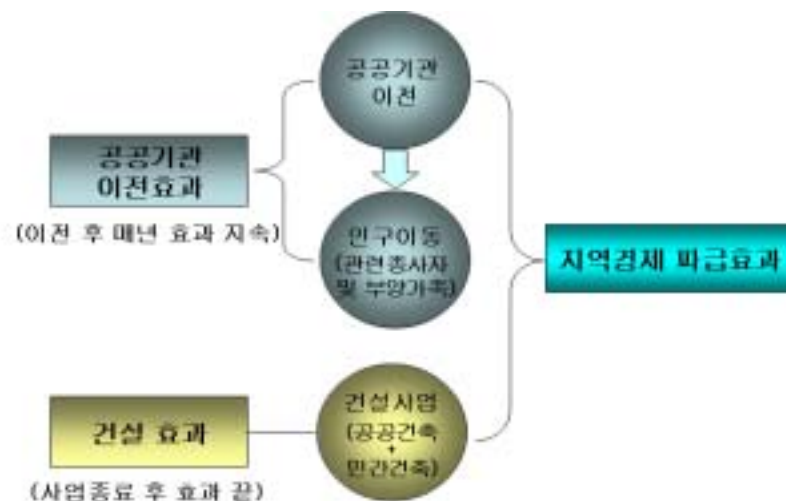
<표 4> 관련연구 요약*

구분	분석대상 또는 전제	분석방법	분석결과	비고
전명진·허재완(2003)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한 충남 인구 및 고용 효과	변형된 Lowry 모형	2030년 기준 충남 · 인구 48만명 증가 · 고용 약 8만 3천개 증가	인구이동효과 (관련부문 종사자 및 인구)
이동수(2003)	신행정수도건설비 54조원 · 건설비용: 27조원 · 토목비용: 21조 6천억원 · 사업서비스 5조 4천억원	1995년 산업연관표 (IO 모형)	· 생산유발: 129조 6천억원 · 부가가치유발: 46,355천억원 · 고용유발: 15만명	건설효과
장철기(2003)	행정수도 이전비용 30조원	정부제2청사 대전이전효과 유추	충청권 내 연간효과 · 생산유발: 2조원 · 고용유발: 2만 5천명	건설효과
김의준(2003)	신행정수도 건설 : '07-'11 집중, 2020년 종료 신행정수도 사업비: 37조 3,250억원 · 건설비: 26조 4,750억원 · 토지매입비: 10조 8,500억원	CGE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07-'20년 국내총생산에 변화 47조8,100억~48조4,100억원 (수도권과 중부권, 그리고 영·호남권의 효과 구분하여 지역별 효과 제시하고 있음)	건설효과
김선재(2004)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비 : 45조 6천억원	단일 지역 IO 모형	대전·충남 지역효과 · 생산유발: 74조원 · 고용유발: 55만명	건설효과
충남발전연구원(2005)	충남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 개발사업비: 8조 5천억원 · 이전규모: 2,709명 · 이전기관예산규모: 9,003억원	MRIO 모형	충남, 대전, 기타지역의 효과를 구분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으로 구분 제시함	건설효과 + 공공기관 이전효과

- *: 이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부문에서 행정도시 건설의 효과가 분석되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발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청사건설을 포함한 복합도시의 건설(그림 2의 B)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함(그림 2의 d)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시킴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건설효과(B)와 공공기관 이전효과(d)가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함
- 특히 건설효과의 경우 개발사업 종료 후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반면, 공공기관의 이전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함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주 효과는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공공기관 이전효과 중 인구이동 부분은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수반되는 부양가족의 이동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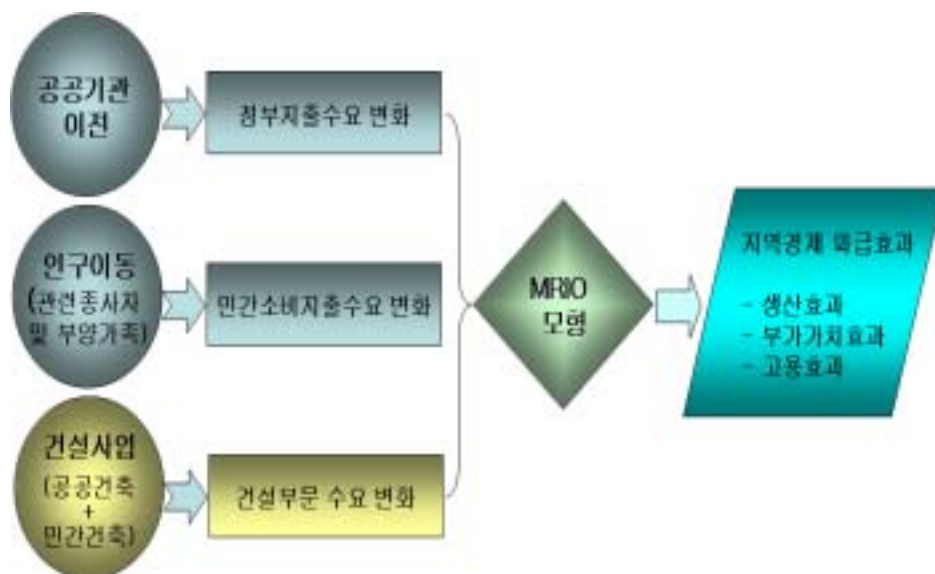
[그림 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효과 구분

- 그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업비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효과를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건설효과와 공공기관 이전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그림 4] 참조)

III. 모형

1. 분석과정 및 전제

- 일반적으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그의 효과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가치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특성 때문에 CGE 모형은 정책이나 개발계획의 효과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석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차원에서 CGE 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므로, 이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분석결과의 현실적합성은 떨어짐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ulti-region input-output, MRIO model)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함



[그림 5]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과정

-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그림 5]에 요약된 바와 같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정부지출수요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민간소비지출수요 변화, 그리고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건설부문 수요변화로 구분하여 분석이 진행됨
- 단,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전제함
 -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모든 효과는 2000년 불변가격으로 제시됨
 - 왜냐하면 MRI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MRIO 표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표의 작성을 위해서 기본적 자료로 활용되는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전국 산업연관표가 2000년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사업의 효과는 2030년까지만 발생됨을 전제함
 -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음
 -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부양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이동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리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의 종사자와 부양가족은 2012년에 모두 이전 또는 이동하는 것으로 전제함
 - 이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건설비용의 연차별 배분은 <표 3>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됨을 가정함

2. MRIO 모형

- MRIO 모형은 지역간 산업간 재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바탕으로 지역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해당 지역경제를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결과를 제시함
- 이러한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구조는 [그림 6] 과 같음
 - 단,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국민경제는 r 과 s 의 두 지역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역 모두 m 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함

투입			배분	중 간 수 요								최종수요		총 산 출
				지역 r				지역 s				지역 r	지역 s	
				1	...	j	...	n	1	...	j			
중 간 투 입	지 역 r	1 ⋮ i ⋮ n		$c_i^{rr} a_{ij}^r X_j^r$				$c_i^{rs} a_{ij}^s X_j^s$			$c_i^{rr} F_i^r$	$c_i^{rs} F_i^s$	X_i^r	
	지 역 s	1 ⋮ i ⋮ n		$c_i^{sr} a_{ij}^r X_j^r$				$c_i^{ss} a_{ij}^s X_j^s$			$c_i^{sr} F_i^r$	$c_i^{ss} F_i^s$	X_i^s	
부 가 가 치	노동 자본			$w_j^r L_j^r$ $r_j^r K_j^r$				$w_j^s L_j^s$ $r_j^s K_j^s$						
총투입				X_j^r				X_j^s						

- c_i^{rs} : 지역간 교역계수, a_{ij}^r : 투입계수, w_j^r : 임금, r_j^r : 자본수익률, F_i^r : 최종수요, X_i^r : 총산출액.

[그림 6] MRIO 표의 구조

1) 생산유발효과

- 앞의 그림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구조에 나타난 재화의 배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CAX + CF = X, \quad \dots(1)$$

X : 지역별 산업별 총투입액 벡터($nm \times 1$), F : 최종수요 벡터($nm \times 1$),
 C : 지역간 교역계수 행렬($nm \times nm$), A : 투입계수 행렬($nm \times nm$),
 n : 산업부문의 수, m : 지역의 수.

- 위의 식(1)로부터 지역별 산업별 산출액과 각 산업별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와의 관계는 식(2)와 같이 표현됨
- 이를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최종수요의 변화가 각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됨

$$\Delta X = (I - CA)^{-1} C \Delta F \quad \dots(2)$$

-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각 지역 및 전국의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부가가치승수(value-added multiplier)와 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를 통해 계산됨

2) 부가가치 효과

- 부가가치 효과란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효과를 말함
- 이러한 부가가치 효과는 식(3)에 제시된 부가가치 승수에 의해 측정됨

$$\Delta V = V_f \cdot \Delta F, \quad V_f = A_v \cdot (I - CA)^{-1} \cdot C, \quad \dots(3)$$

V : 부가가치, V_f : 부가가치 승수, A_v : 부가가치 계수.

3) 고용효과

- 고용효과란 각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 투입계수와 승수행렬의 곱으로 구해지는 고용승수를 이용하여 측정됨

$$\Delta E = W_f \cdot \Delta F, \quad W_f = E_w \cdot (I - CA)^{-1} C. \quad \dots(4)$$

E : 고용, W_f : 고용 승수, E_w : 고용투입계수.

3.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

- MRIO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RIO 표가 작성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지역 투입산출표가 공식적으로 조사·발표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한국은행(2003)에서 발표한 전국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Polenske(1980)가 제시한 간접적 방법을 통해 MRIO 표를 작성함

1) 지역 및 산업의 구분

- MRIO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구분임
- 왜냐하면 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분석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지역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5> 지역의 구분

구분		해당 광역행정구역
충청권	충청남도	충청남도
	대전 · 충북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타 지역		충청권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여기서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됨

-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광역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므로, 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사업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이 도시가 위치하는 충청남도와 인근지역(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도)에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행정기능이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2)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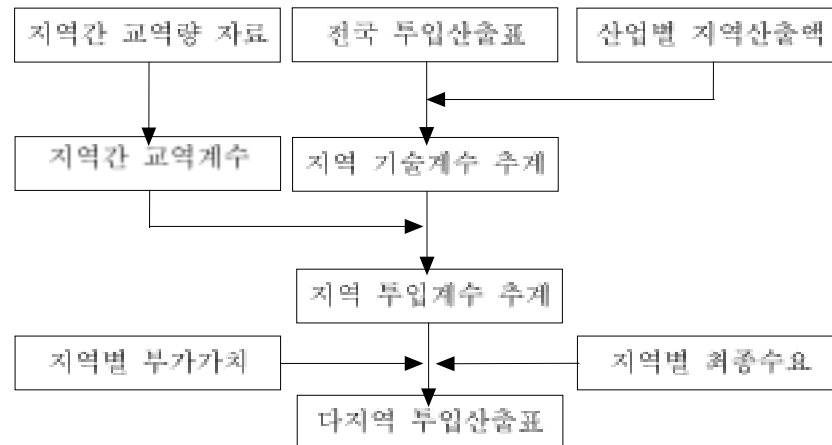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MRIO 표 작성을 위한 산업의 분류는 2000년 기준 전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3)의 77개 산업 중분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구득 및 분석결과의 구체성 정도를 고려하여 총 15개 산업으로 구분함
- 구분된 각 산업에 해당하는 세부산업(77개 산업)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이 외 MRIO 표의 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6> 산업의 구분

구 분	해 당 산 업
1.농림수산 및 광업	0001.작물 0002.축산 0003.임산물 0004.수산물 0005.석탄 0006.원유및천연가스 0007.금속광석 0008.비금속광물
2.음식료품	0009.육류및육가공품 0010.수산물가공품 0011.정곡및제분 0012.제당및전분 0013.빵,과자및곡수류 0014.조미료및유지 0015.과채가공품및기타식료품 0016.음료품 0017.배합사료 0018.담배
3.섬유, 가죽, 종이	0019.섬유사 0020.섬유직물 0021.의류및장신품 0022.기타섬유제품 0023.가죽제품및모피 0024.목재및나무제품 0025.펄프및종이 0026.인쇄,출판및복제
4.석탄, 석유 및 화학	0027.석탄제품 0028.석유제품 0029.유기화학기초제품 0030.무기화학기초제품 0031.합성수지및합성고무 0032.화학섬유 0033.비료및농약 0034.의약품및화장품 0035.기타화학제품 0036.플라스틱제품 0037.고무제품
5.유리 및 비금속광물	0038.유리제품 0039.도자기및점토제품 0040.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0041.기타비금속광물제품
6.철강 및 기계	0042.선철및강판제품 0043.철강1차제품 0044.비금속괴및1차제품 0045.금속제품 0046.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0047.기타특수목적용기계
7.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0048.전기기계및장치 0049.전자기기부분품 0050.영상,음향및통신기기 0051.컴퓨터및사무기기 0052.가정용전기기기 0053.정밀기기
8.자동차 및 수송기기	0054.자동차및부분품 0055.선박 0056.기타수송장비
9.가구 및 기타제조업	0057.가구 0058.기타제조업제품
10.전기, 가스, 수도	0059.전력 0060.도시가스및수도
11.건축 및 건설	0061.건축및건축보수 0062.건설
12.도소매,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 및 방송	0063.도소매 0064.음식점및숙박 0065.운수및보관 0066.통신및방송
13.금융,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67.금융및보험 0068.부동산 0069.사업서비스
14.공공행정,국방,교육및보건	0070.공공행정및국방 0071.교육및연구 0072.의료,보건및사회보장
15.문화, 오락서비스 및 기타	0073.문화오락서비스 0074.기타서비스 0075.사무용품 0076.가계의소비지출 0077.분류불명

4) MRIO 표 작성과정

- MRIO 표의 작성과정은 [그림 7]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



[그림 7] 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

(1) 지역기술계수의 추계

- 지역기술계수는 해당 지역의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중간투입재의 규모만을 나타낼 뿐,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이입된 것인지는 구분되지 않음
- 지역기술계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제품혼합법(product-mix method), 가중치기법(weighting method), 입지상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식(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혼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술계수를 추계함
 - 제품혼합법이란 산업이 세밀하게 구분될수록 각 산업의 투입구조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기술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임

$$a_{ij}^r = \frac{\sum_k a_{ijk}^N \cdot x_{jk}^r}{X_j^r}, \quad \dots(5)$$

a_{ij}^r : 지역의 기술계수, a_{ijk}^N : 전국의 투입계수,
 x_{jk}^r : 지역 내 j 산업의 세분된 k 산업의 산출액.

(2) 지역간 교역계수의 추계

- 지역간 교역계수는 지역간 재화의 거래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조사방법과 함께 중력모형, 엔트로피모형, 입지상(location quotient, LQ)법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됨(한국개발연구원, 2000)
- 본 연구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간 물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교역계수를 추계함
 -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단순 LQ 법을 이용하여 추계함

(3) 지역투입계수 추계

- 지역투입계수는 지역 내 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어느 지역 어느 산업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이는 식(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간 교역계수의 곱으로 계산됨

$$CA = \begin{bmatrix} C^{rr} & C^{rs} \\ C^{sr} & C^{ss}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A^r & 0 \\ 0 & A^s \end{bmatrix}, \quad \dots(6)$$

CA : 지역투입계수행렬, C^{rs} : 지역간교역계수행렬, A^r : 지역기술계수행렬.

- 그리고 지역별로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수요와 정부지출수요, 투자수요, 그리고 수출입 수요 등으로, 그리고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그리고 간접세 등으로 구분됨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추계는 한국토지공사 (2004)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짐
- 이렇게 작성된 MRIO 표와 모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는 구체적으로 분석됨
- 단, 이를 위해서는 최종수요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짐

IV. 분석

1. 최종수요의 변화

1) 정부지출수요 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규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1,962명임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 이동규모가 곧바로 지역의 정부지출수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공공부문 종사자 수와 정부지출수요의 변화는 식(6)과 같이 선형관계에 있음을 전제함

$$g^r = G^r / L_G^r, \quad \dots(6)$$

g^r : 공공부문 종사자 1인당 정부소비출액,

G^r : 지역 내 정부소비지출액, L_G^r : 지역내 공공부문 종사자 수.

- 여기서 공공부문 종사자 일인당 예산액은 충남발전연구원(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²⁾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이동 종사자 규모를 바탕으로 지역 내 정부지출수요의 변화는 식(7)과 같이 계산됨

$$\Delta G^r = g^r \cdot \Delta L_G^r \quad \dots(7)$$

2) 공공부문 종사자 일인당 예산액(충남발전연구원, 2005)

이전대상 공공부문 종사자 (A)	예산액 (B)	일인당 예산액 (B/A)
2,709명	9,003억원	3,323억원/명

○ 앞의 식(7)을 통해 계산된 연차별 정부지출 수요변화는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단, 표에 제시된 정부지출수요 변화액은 200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된 금액이며, 본 연구에서 현재가치화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연 4%임

<표 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지출수요 변화(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07-'1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도권	-	-	-24,830	-23,875	-22,967	-22,074	-21,225	-20,409	-19,624	-18,869	-18,143
충청권	충남	-	24,830	23,875	22,967	22,074	21,225	20,409	19,624	18,869	18,143
	대전·충북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7,445	-16,774	-16,129	-15,509	-14,912	-14,339	-13,787	-13,257	-12,747	-12,257	-339,164
충청권	충남	17,445	16,774	16,129	15,509	14,912	14,339	13,787	13,257	12,747	339,164
	대전·충북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 *: 할인율 연 4% 적용.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부지출수요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조 9,164억원이 증가하며, 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일한 정부지출수요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됨

2) 민간소비지출수요 변화

○ 민간소비수요의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공공

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원과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인구를 기초로 추정됨

-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총 이동규모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의 의존인구로 구분됨
- 그리고 의존인구는 식(8)에 제시된 지역의 의존승수를 통해 계산됨

$$DR^r = \frac{P^r}{E^r} \quad \dots(8)$$

DR^r : 지역의 의존승수, $E^r(P^r)$: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인구).

- 본 연구에서 지역의 의존승수는 충남발전연구원(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를 적용함³⁾
 - 지역별 인구 규모 및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 출발지역(origin)인 수도권 지역의 의존승수는 2.2로 추정됨
 - 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1인당 1.2명이 의존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임
 - 그리고 민간소비지출 수요 변화는 앞서 설명한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와 동일하게 인구이동 규모와 선형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도출될 수 있음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충청남도의 민간소비지출 수요는 총 2조 932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동일한 금액의 민간소비지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됨
- 각 지역별로 연차별 민간소비지출수요 변화는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음

3) 충남발전연구원(2005)에 제시된 지역의 의존승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경제활동인구	인구	의존승수
충남 · 대전 지역	1,522천명	3,345천명	2.2
기타 지역	20,546천명	44,737천명	2.2
전국 계	22,068천명	48,082천명	2.2

**<표 8>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변화(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07-'1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도권	-	-	-1,530	-1,471	-1,415	-1,360	-1,308	-1,258	-1,209	-1,163	-1,118
충청권											
충남	-	-	1,530	1,471	1,415	1,360	1,308	1,258	1,209	1,163	1,118
대전·충북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075	-1,034	-994	-956	-919	-884	-850	-817	-786	-786	-20,932
충청권											
충남	1,075	1,034	994	956	919	884	850	817	786	786	20,932
대전·충북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전국계	-	-	-	-	-	-	-	-	-	-	-

- *: 할인율 연 4% 적용.

3) 건설부문 수요 변화(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

- <표 1>의 각 항목별 사업비 자료와 <표 3>에 제시된 개발일정에 따라 배분된 연차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는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단, 개발사업비는 충청남도의 건설수요만을 변화시키며, 200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는 총 26조 3,632억원이며, 각 연차별 개발사업비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9> 연차별 개발사업비(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발사업비	15,174		37,042	31,752	30,531	17,950	17,260	16,59.6	7,393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발사업비	7,108	6,835	6,572	6,319	6,076	5,842	5,618	5,402	5,194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개발사업비	4,994	4,802	4,617	4,440	4,269	4,105	3,947	3,795	263,632

- *: 할인율 연 4% 적용.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별 연차별 최종수요의 변화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분석됨
- 여기서는 분석된 결과를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함

1) 생산효과

- 정부소비지출 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42조 614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총 31조 9,803억원의 생산액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기타 지역 모두에서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로 인해 정(+)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3,188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30,793	-29,609	-28,470	-27,375	-26,322	-25,310	-24,336
충청권	충남	-	-	-	-	-	23,413	22,512	21,646	20,814	20,013	19,244	18,503
	대전·충북	-	-	-	-	-	2,028	1,950	1,875	1,803	1,733	1,667	1,603
	(소계)	-	-	-	-	-	25,441	24,462	23,521	22,617	21,747	20,910	20,106
기타	-	-	-	-	-	-	4,387	4,218	4,056	3,900	3,750	3,606	3,467
전국계	-	-	-	-	-	-	-966	-928	-893	-858	-825	-794	-763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23,400	-22,500	-21,635	-20,803	-20,003	-19,233	-18,494	-17,782	-17,098	-16,441	-15,808	-15,200	-420,614
충청권	충남	17,792	17,108	16,450	15,817	15,209	14,624	14,061	13,520	13,000	12,500	12,020	319,803
	대전·충북	1,541	1,482	1,425	1,370	1,317	1,267	1,218	1,171	1,126	1,083	1,041	27,697
	(소계)	19,333	18,589	17,874	17,187	16,526	15,890	15,279	14,691	14,126	13,583	13,060	347,500
기타	3,334	3,206	3,082	2,964	2,850	2,740	2,635	2,533	2,436	2,342	2,252	2,166	59,926
전국계	-734	-705	-678	-652	-627	-603	-580	-558	-536	-515	-496	-477	-13,188

○ 인구이동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음

-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조 6,03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총 1조 2,182억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총 71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1,172	-1,127	-1,084	-1,042	-1,002	-964	-926
충청권	충남	-	-	-	-	-	891	856	823	792	761	732	704
	대전·충북	-	-	-	-	-	111	107	103	99	95	91	88
	(소계)	-	-	-	-	-	1,002	963	926	891	856	823	792
기타	-	-	-	-	-	-	118	114	109	105	101	97	93
전국계	-	-	-	-	-	-	-52	-50	-48	-47	-45	-43	-41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891	-857	-824	-792	-762	-732	-704	-677	-651	-626	-602	-602	-16,036
충청권	충남	677	651	626	602	578	556	536	514	494	475	457	12,182
	대전·충북	85	81	78	75	72	69	67	64	62	59	57	1,522
	(소계)	761	732	704	677	651	626	602	579	556	535	514	13,703
기타	90	86	83	80	77	74	71	68	66	63	61	61	1,617
전국계	-40	-38	-37	-35	-34	-33	-31	-30	-29	-28	-27	-27	-716

- 건설수요 변화로 인한 생산효과는 <표 12>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3조 91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생산효과는 총 26조 5,146억원이며, 기타 지역은 총 20조 2,661억원, 그리고 충청남도는 11조 8,329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 여기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효과 중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것임
 - 즉,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충청남도 외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임

<표 12>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261	37,255	31,994	30,706	18,053	17,359	16,691	7,435	7,149	6,874	6,610	6,355	6,111
충청권	충남	6,811	16,626	14,252	13,703	8,057	7,747	7,449	3,318	3,190	3,068	2,950	2,836	2,727
	대전·충북	2,530	6,176	5,294	5,090	2,993	2,878	2,767	1,233	1,185	1,140	1,096	1,054	1,013
	(소계)	9,340	22,802	19,546	18,794	11,050	10,625	10,216	4,551	4,376	4,207	4,045	3,890	3,740
기타		11,664	28,475	24,409	23,470	13,799	13,268	12,758	5,683	5,464	5,254	5,052	4,858	4,671
전국계		36,266	88,533	75,888	72,970	42,902	41,252	39,665	17,668	16,989	16,335	15,707	15,103	14,522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5,876	5,650	5,433	5,224	5,023	4,830	4,644	4,465	4,293	4,128	3,970	3,817	265,146
충청권	충남	2,622	2,521	2,424	2,331	2,242	2,155	2,072	1,993	1,916	1,842	1,772	1,703	118,329
	대전·충북	974	937	901	866	833	801	770	740	712	684	658	633	43,955
	(소계)	3,596	3,458	3,325	3,197	3,074	2,956	2,842	2,733	2,628	2,527	2,430	2,336	162,284
기타		4,491	4,318	4,152	3,993	3,839	3,691	3,549	3,413	3,282	3,155	3,034	2,917	202,661
전국계		13,964	13,426	12,910	12,414	11,936	11,477	11,036	10,611	10,203	9,811	9,433	9,070	630,091

○ 지금까지 설명한 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생산효과를 종합하면 <표 13>와 같음

- 분석결과,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1조 6,187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충청남도의 생산증가효과는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이며, 대전·충북 지역은 총 7조 3,174억원으로 분석됨

**<표 13>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생산효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261	37,255	31,994	30,706	18,053	17,359	-15,274	-23,301	-22,405	-21,543	-20,715	-19,918	-19,152
충청권	충남	6,811	16,626	14,252	13,703	8,057	7,747	31,752	26,687	25,660	24,673	23,724	22,812
	대전·충북	2,530	6,176	5,294	5,090	2,993	2,878	4,906	3,289	3,163	3,041	2,924	2,812
	(소계)	9,340	22,802	19,546	18,794	11,050	10,625	36,658	29,976	28,823	27,714	26,648	24,638
기타	11,664	28,475	24,409	23,470	13,799	13,268	17,263	10,015	9,630	9,259	8,903	8,561	8,232
전국계	36,266	88,533	75,888	72,970	42,902	41,252	38,647	16,690	16,048	15,431	14,837	14,266	13,718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8,415	-17,707	-17,026	-16,371	-15,741	-15,136	-14,554	-13,994	-13,456	-12,938	-12,441	-11,965	-171,504
충청권	충남	21,091	20,280	19,500	18,750	18,029	17,335	16,668	16,027	15,411	14,818	14,248	450,314
	대전·충북	2,600	2,500	2,403	2,311	2,222	2,137	2,054	1,975	1,899	1,826	1,756	73,174
	(소계)	23,690	22,779	21,903	21,061	20,251	19,472	18,723	18,003	17,310	16,645	16,004	523,488
기타	7,915	7,611	7,318	7,036	6,766	6,505	6,255	6,015	5,783	5,561	5,347	5,144	264,203
전국계	13,190	12,683	12,195	11,726	11,275	10,841	10,424	10,023	9,638	9,267	8,911	8,567	616,187

2) 부가가치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효과는 <표 14>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6조 2,574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청남도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총 21조 687억원이 증가하며, 대전 · 충북 지역은 1조 4,091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2조 4,788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부가가치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 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19,223	-18,484	-17,773	-17,089	-16,432	-15,800	-15,192
충청권	충남	-	-	-	-	-	15,424	14,831	14,261	13,712	13,185	12,678	12,190
	대전·충북	-	-	-	-	-	1,032	992	954	917	882	848	815
	(소계)	-	-	-	-	-	16,456	15,823	15,215	14,629	14,067	13,526	13,005
기타	-	-	-	-	-	-	2,767	2,661	2,558	2,460	2,365	2,274	2,187
전국계	-	-	-	-	-	-	-	-	-	-	-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4,608	-14,046	-13,506	-12,986	-12,487	-12,007	-11,545	-11,101	-10,674	-10,263	-9,869	-9,489	-262,574
충청권	충남	11,721	11,270	10,837	10,420	10,019	9,634	9,264	8,907	8,565	8,235	7,918	210,687
	대전·충북	784	754	725	697	670	644	620	596	573	551	530	14,091
	(소계)	12,505	12,024	11,562	11,117	10,690	10,278	9,883	9,503	9,137	8,786	8,448	224,778
기타	2,103	2,022	1,944	1,869	1,797	1,728	1,662	1,598	1,536	1,477	1,421	1,366	37,796
전국계	-	-	-	-	-	-	-	-	-	-	-	-	-

○ 그리고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표 15>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8,377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충북의 부가가치는 각각 총 6,742억원과 728억원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7,47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5>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부가가치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412	-589	-566	-544	-524	-500	-484
충청권	충남	-	-	-	-	-	-	493	474	456	438	421	405	390
	대전·충북	-	-	-	-	-	-	53	51	49	47	45	44	42
	(소계)	-	-	-	-	-	-	546	525	505	485	467	449	432
기타		-	-	-	-	-	-	66	64	61	59	57	55	52
전국계		-	-	-	-	-	-	-	-	-	-	-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465	-447	-430	-414	-398	-383	-368	-354	-340	-327	-314	-314	-8,377
충청권	충남	375	360	346	333	320	308	296	285	274	263	253	253	6,742
	대전·충북	40	39	37	36	35	33	32	31	30	28	27	27	728
	(소계)	415	399	384	369	355	341	328	315	303	292	280	280	7,470
기타		50	48	47	45	43	41	40	38	37	35	34	34	908
전국계		-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를 통해 발생하는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표 16>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앞서 설명한 생산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 역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1조 4,829억원, 기타 지역에서는 7조 9,012억원,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6조 9,79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총 5조 2,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효과(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6,609	16,134	13,830	13,298	7,819	7,518	7,229	3,220	3,096	2,977	2,863	2,752	2,647
충청권	충남	3,030	7,396	6,340	6,096	3,584	3,446	3,314	1,476	1,419	1,365	1,312	1,262
	대전·충북	987	2,410	2,066	1,986	1,168	1,123	1,080	481	462	445	428	411
	(소계)	4,017	9,806	8,406	8,082	4,752	4,569	4,393	1,957	1,882	1,809	1,740	1,673
기타	4,548	11,102	9,516	9,150	5,380	5,173	4,974	2,216	2,130	2,048	1,970	1,894	1,821
전국계	15,174	37,042	31,752	30,531	17,950	17,260	16,506	7,393	7,108	6,835	6,572	6,319	6,076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2,545	2,447	2,353	2,262	2,175	2,092	2,011	1,934	1,859	1,788	1,719	1,653	114,829
충청권	충남	1,167	1,122	1,079	1,037	997	959	922	886	852	820	788	52,640
	대전·충북	380	365	351	338	325	312	300	289	278	267	257	17,151
	(소계)	1,547	1,487	1,430	1,375	1,322	1,271	1,222	1,175	1,130	1,087	1,045	69,791
기타	1,751	1,684	1,619	1,557	1,497	1,439	1,384	1,331	1,279	1,230	1,183	1,137	79,012
전국계	5,842	5,618	5,402	5,194	4,994	4,802	4,617	4,440	4,269	4,105	3,947	3,795	263,632

- 지금까지 설명한 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를 종합하면 <표 17>과 같음
- 분석결과,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6조 3,632억원의 부가가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같은 기간 총 27조 69억원이며, 대전·충북 지역은 총 3조 1,970원으로, 충청권 전체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총 30조 2,039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의 부가가치는 총 15조 6,12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7>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효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단위: 억 원)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6,609	16,134	13,830	13,298	7,819	7,518	-12,607	-15,853	-15,243	-14,657	-14,093	-13,551	-13,030
충 청 권	충남	3,030	7,396	6,340	6,096	3,584	3,446	19,231	16,781	16,136	15,515	14,918	14,345
	대전·충북	987	2,410	2,066	1,986	1,168	1,123	2,165	1,524	1,465	1,409	1,355	1,303
	(소계)	4,017	9,806	8,406	8,082	4,752	4,569	21,396	18,305	17,601	16,924	16,273	15,648
기타	4,548	11,102	9,516	9,150	5,380	5,173	7,807	4,940	4,750	4,567	4,392	4,223	4,060
전국계	15,174	37,042	31,752	30,531	17,950	17,260	16,596	7,393	7,108	6,835	6,572	6,319	6,076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2,529	-12,047	-11,583	-11,138	-10,710	-10,298	-9,902	-9,521	-9,155	-8,802	-8,464	-8,130	-156,122
충 청 권	충남	13,262	12,752	12,262	11,790	11,337	10,901	10,481	10,078	9,691	9,318	8,960	270,069
	대전·충북	1,204	1,158	1,114	1,071	1,030	990	952	915	880	846	814	31,970
	(소계)	14,467	13,910	13,375	12,861	12,366	11,891	11,433	10,994	10,571	10,164	9,773	302,039
기타	3,904	3,754	3,610	3,471	3,337	3,209	3,086	2,967	2,853	2,743	2,638	2,537	117,716
전국계	5,842	5,618	5,402	5,194	4,994	4,802	4,617	4,440	4,269	4,105	3,947	3,795	263,632

3) 고용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고용효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표 18>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6,280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청남도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3,934백명이 증가하며, 대전
 - 충북 지역은 261백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4,194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외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총 1,117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정부지출 수요변화에 의해 총 969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8>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460	-442	-425	-409	-390	-378	-363
충청권	충남	-	-	-	-	-	288	277	266	256	246	237	228
	대전·충북	-	-	-	-	-	19	18	18	17	16	16	15
	(소계)	-	-	-	-	-	307	295	284	273	262	252	243
기타	-	-	-	-	-	-	82	79	76	73	70	67	65
전국계	-	-	-	-	-	-	-71	-68	-66	-63	-61	-58	-56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349	-336	-323	-311	-299	-287	-276	-266	-255	-245	-236	-227	-6,280
충청권	충남	219	210	202	195	187	180	173	166	160	154	148	3,934
	대전·충북	14	14	13	13	12	12	11	11	11	10	9	261
	(소계)	233	224	216	207	199	192	184	177	170	164	158	4,194
기타	62	60	57	55	53	51	49	47	45	44	42	40	1,117
전국계	-54	-52	-50	-48	-46	-44	-43	-41	-39	-38	-36	-35	-969

○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표 19>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분석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14백명의 고용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 · 충북의 고용은 각각 총 221백명과 13백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34백명의 고용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기타 지역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42백명이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총 62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	-	-	-	-	-	-16	-15	-14	-14	-13	-13	-12
충청권	충남	-	-	-	-	-	16	16	15	14	14	13	13
	대전·충북	-	-	-	-	-	1	1	1	1	1	1	1
	(소계)	-	-	-	-	-	17	16	16	15	15	14	13
기타	-	-	-	-	-	-	3	3	3	3	3	3	2
전국계	-	-	-	-	-	-	5	4	4	4	4	4	4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12	-11	-11	-11	-10	-10	-9	-9	-9	-8	-8	-8	-214
충청권	충남	12	12	11	11	10	10	9	9	9	8	8	221
	대전·충북	1	1	1	1	1	1	1	1	1	0	0	13
	(소계)	13	12	12	12	11	11	10	10	9	9	9	234
기타	2	2	2	2	2	2	2	2	2	2	2	2	42
전국계	3	3	3	3	3	3	3	3	3	2	2	2	62

-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표 20>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앞서 설명한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와 동일하게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 역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759백명, 기타 지역에서는 1,291백명,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2,229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1,969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9	388	332	319	188	181	174	77	74	72	69	66	64
충청권	충남	113	277	237	228	134	129	124	55	53	51	49	47	45
	대전·충북	15	37	31	30	18	17	16	7	7	7	6	6	6
	(소계)	128	313	268	258	152	146	140	62	60	58	56	53	51
기타		74	181	156	150	88	85	81	36	35	33	32	31	30
전국계		361	882	756	727	428	411	395	176	169	163	157	151	145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61	59	57	54	52	50	48	46	45	43	41	40	2,759
충청권	충남	44	42	40	39	37	36	34	33	32	31	29	28	1,969
	대전·충북	6	6	5	5	5	5	5	4	4	4	4	4	260
	(소계)	49	47	46	44	42	41	39	38	36	35	33	32	2,229
기타		29	28	26	25	24	24	23	22	21	20	19	19	1,291
전국계		139	134	129	124	119	114	110	106	102	98	94	90	6,279

○ 지금까지 설명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고용효과 종합하면 <표 21>와 같음

- 분석결과,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372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충청남도의 고용효과는 같은 기간 총 6,123백명이며, 대전 · 충북 지역은 총 533백명으로, 충청권 전체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6,657백명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수도권 지역은 이 기간 총 3,735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고용효과 종합

(단위: 백명)

구분	'05-'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59	388	332	319	188	181	-302	-380	-365	-351	-338	-325	-312
충청권	충남	113	277	237	228	134	129	428	348	334	321	309	297
	대전·충북	15	37	31	30	18	17	36	27	26	25	24	23
	(소계)	128	313	268	258	152	146	464	374	360	346	333	320
기타	74	181	156	150	88	85	166	118	113	109	105	101	97
전국계	361	882	756	727	428	411	329	112	108	104	100	96	92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수도권	-300	-289	-277	-267	-257	-247	-237	-228	-219	-211	-203	-195	-3,735
충청권	충남	275	264	254	244	235	226	217	209	201	193	186	6,123
	대전·충북	21	20	19	19	18	17	16	15	15	14	14	533
	(소계)	296	284	273	263	253	243	234	225	216	208	192	6,657
기타	93	90	86	83	80	77	74	71	68	65	63	61	2,450
전국계	89	85	82	79	76	73	70	67	65	62	60	58	5,372

V.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사업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즉 ‘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지출 수요변화’와 ‘② 관련 인구이동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 그리고 ‘③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 부문 수요변화’의 측면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함
 - 그리고 이들 효과는 다시 ‘공공기관 이전효과’(①+②)와 ‘건설효과’(③)로 요약되며, 구분된 항목별로 지역의 생산 및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2030년까지 연차별로 분석됨
- 분석된 결과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종합된 효과만을 설명함(<표 22> 참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을 총 61조 6,187억원, 부가가치를 26조 3,632억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고용은 같은 기간 총 5,372백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되는 충청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의 생산증가와 27조 69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그리고 6,123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모두에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주로 건설효과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기인한 것임
 -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 제공기능이 충청남도로 이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ceteris paribus),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의 효과가, 반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정(+)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
- 그러나 건설사업을 위해 투여되는 개발사업비는 모든 지역에서 공히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참고적으로 각 지역별 경제규모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행정중심도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효과를 2004년 기준 지역의 경제규모(GRDP)와 비교하면⁴⁾, 충청권은 이 개발사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총 38.7%의 지역경제 성장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사업의 직접 대상지인 충청남도는 같은 기간 70.8%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 효과 및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 효과 4.1%와 비교했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

4) 일반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지역 내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을 가리키며, 2005년 기준 각 지역별 GRDP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수도권	충청권			기타	전국 계
		충남	대전·충북	(소재)		
2005년 (억원)	3,355,686	381,386	399,259	780,645	2,891,728	7,028,059
GRDP (구성비율)	47.7%	5.4%	5.7%	11.1%	41.1%	100.0%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구분			생산효과 (억원)	부가가치효과 (억원)	고용효과 (백명)
공공기관 이전효과 (A)	수도권		-436,650	-270,951	-6,494
	충청권	충청남도	331,985	217,429	4,154
		대전·충북	29,219	14,819	273
		(소계)	361,203	232,248	4,428
	기타		61,543	38,703	1,159
	전국 계		-13,904	-	-907
건설효과 (B)	수도권		265,146	114,829	2,759
	충청권	충청남도	118,329	52,640	1,969
		대전·충북	43,955	17,151	260
		(소계)	162,284	69,791	2,229
	기타		202,661	79,012	1,291
	전국 계		630,091	263,632	6,279
효과종합 (A+B)	수도권		-171,504	-156,122	-3,735
	충청권	충청남도	450,314	270,069	6,123
		대전·충북	73,174	31,970	533
		(소계)	523,488	302,039	6,657
	기타		264,203	117,716	2,450
	전국 계		616,187	263,632	5,372

- 결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특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큰 경제성장 효과를 발생시킴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핵심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토의 균형개발이 단순히 지역들의 경제규모나 수준을 특정 수준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지역들의 역동적인 발전기회를 조성하고 또한 지역의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의 제시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임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이에 부합되는 분석결과가 새로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석방법론 상에 있어서도 부분균형체계의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함으로써, CGE 모형과 같은 일반균형체계 하의 분석결과와 차이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및 후속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보다 현실적합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함

< 참 고 문 헌 >

-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 김의준(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 김홍배(2003), 「정책평가기법: 비용-편익 분석론」, 나남출판사.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이동수(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방향에 관한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 이선재(2004), “행정수도의 대전·충청권 이전이 지역 및 도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4호, pp.1099-1120.
- 장철기(2003),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충청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충남본부.
- 전명진 · 허재완(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2005), 「공공기관 도내입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현안과제연구.
- 한국개발연구원(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 한국은행(2003),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 한국토지공사(2004), 「지역개발이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토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2005a),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2005b), 「국가균형발전과 제2의 국가도약을 선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Polenske(1980), The U.S. Multi-regional Input-Output Accounts and Models.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I. 서론

- 본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주·연기 지역 건설, 충청도청의 홍성·예산지역 이전지 결정 등 최근의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책사업들이 충남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구현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망 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그 목적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충남지역은 그 동안의 “지리적 측면의 국토 중심”에서 “국가 중추기능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을 이루게 되며, 충청도청의 홍성·예산지역 이전으로 그간 낙후되었던 중부내륙의 지역 활성화의 momentum을 갖게 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도청의 이전으로 충남도는 행정도시-공주-청양-홍성·예산으로 연계되는 행정기능과 중부내륙의 역사·문화·관광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부내륙축과 천안-행정도시-대전-금산으로 연계되는 동부축이 행정도시의 배후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축으로 개발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새롭게 부상되는 발전축별 개발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고속도로, 간선도로, 철도, 항만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본 원고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도청의 이전에 따른 충남지역의 종합적인 교통망체계를 구상하게 됨

- 본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과 규모를 중심으로 충남도에 미치는 될 파급효과를 분석 한 후, 이와 연계한 충남도의 발전축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광역교통망, 지역간선도로망, 철도, 항만 등 교통체계에 대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음

II.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및 건설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로서, 연기·공주지역을 활용해 자족성을 갖춘 행정중심기능을 갖는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자립형의 「신도시형」으로 개발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과 접근성은 다음과 같음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현황

행 정 구 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면 적	예정지역 2,212만평 (주변지역 : 6,769만평)
지리적 특징	중심부에 원수봉(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10km 거리에 위치
교 통 여 건	정부고속철도와 경부선, 정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 - 당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청주공항이24km거리 에 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는 30~50만명 수준이며, 인구규모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에 필요한 시설수요 등을 고려하면 도시의 개발에 6,600~8,300만㎡ 면적이 소요되고, 개발밀도는 300~350인/ha로 설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12부 4처 2청이 이전되는 국가행정기능, 국책연구, 문화·국제교류 등의 보조기능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등의 도시기본기능을 갖게 되는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

- 업무연관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추가 이전
-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문화·국제교류·교육기능의 유치
- 무공해 첨단기업 등 입주를 유도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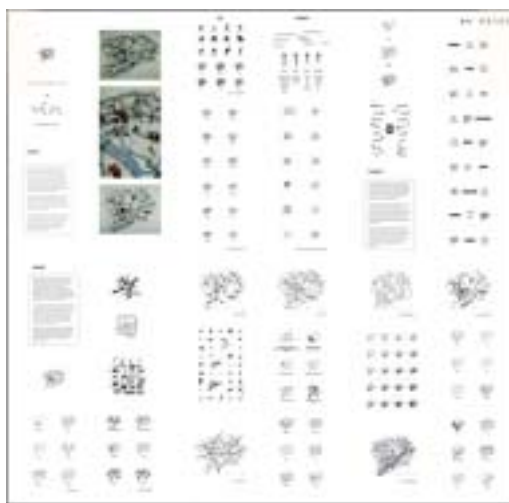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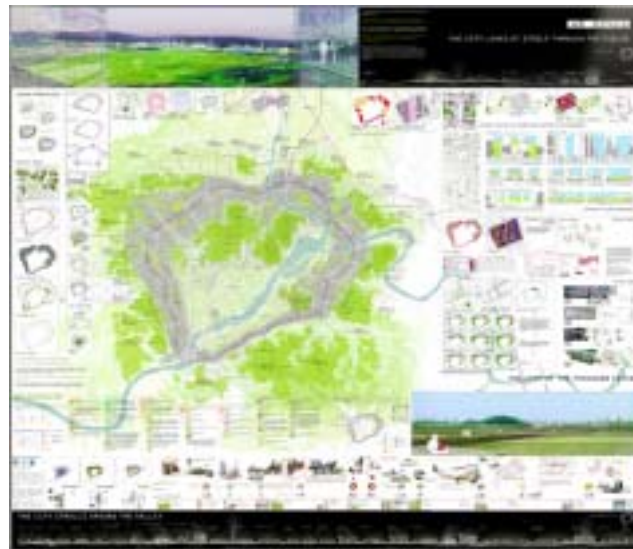
[그림 3]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위성사진)

-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Two-Ring의 기본구조를 갖으며, 도시의 중앙부분은 환경·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도시기능은 환상형 구조를 따라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외부 환상형 구조(Outer Ring)는 개발축 및 대중교통축으로 행정·주거·상업 등의 주요 도시기능을 분산배치하며, 둘레는 20km 내외로 조성하여 도시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20분내외로 접근이 가능토록 함
- 내부 환상형 구조(Inner Ring)는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Open Space로 계획하여 주변부에 레저, 문화 등의 기능을 일부 배치하도록 하는 구조임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환경성 검토 및 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생태축을 보전하고 水공간과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생태녹지체계(Green-Blue Network)를 구축하게 됨
- 충청권내 3개 중심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시, 청주시)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3합형 도시(Tri-City)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기능의 연계·분담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
- 지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과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그리고 대전광역시 전역이며, 지정면적은 3,598km² 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통하여 통근·통학권, 편익시설이나 구매활동, 도시서비스 이용 등 정량적 기준과 도시기능 연계성, 계획적 개발 및 보존이 이루어지게 됨



[그림 4] Two-Ring 개념에 의한 행정도시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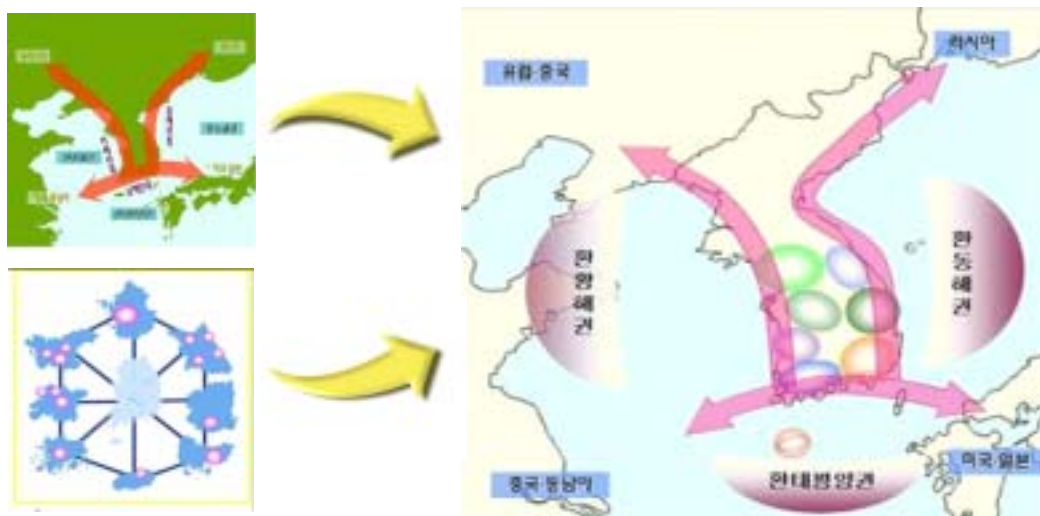
[그림 5] 행정복합도시 국제공모 당선작

Ⅲ.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고려한 국토전략 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통하여,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동적인 국토 실현,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행하는 통합국토가 실현됨
- 이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게 됨
- 또한 지방분산 및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국토발전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함
- 이러한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그림 6] 국토발전체제 구축과정

- 이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상생하는 균형국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전략에 해당함
- 이러한 기본목표 및 전략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상의 3개 연안축 개발과 다핵분산형 국토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간, 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제로의 개편을 필요로 함



[그림 7]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수도권의 기능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기능 분산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분권화 등을 과감히 시행
-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광역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형 경제협력거점 육성함
-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여,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며 중소도시는 전문기능도시로 발

전시키며,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은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농림어업 클러스터 형성, 관광마을 조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

- 권역별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단순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며, 다국적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유치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주요 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며 국제적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함

[그림 8] 10대 광역권의 분포

IV. 행정도시와 연계한 충남 발전전략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주·연기 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충남도는 기존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국토 중심이라는 개념에서 국가 중추기능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됨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충남은 보령~행정중심복합도시~영덕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륙축 형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국토관리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서해안권 일대에 성장을 이끌어갈 거점도시권을 육성할 수 있게 됨
- 또한 충남도청의 홍성·예산 이전으로 행정도시-공주-청양-홍성·예산을 연계하는 중부축(행정도시-도청이전지 개발축)과 서산-홍성-보령-서천 서해안축의 개발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른 발전전략이 필요함
-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서 첨단산업과 전통 농축산업의 상생 발전지역,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 개발이라는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음
- 이러한 발전전략 하에 새로운 혁신·발전거점으로서 환황해권시대의 아산만광역권을 지원하는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산업지대의 활성화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신도시·신시가지 등 도시공간을 확충함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점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북부축, 행정도시-도청이전지 개발축(중부축), 남부축, 서해안축, 중부내륙축, 행정도시 남북축(동부내륙축) 등 발전축별 특화기능을 부여함

<표 2> 발전축별 개발방향

구 분	축 별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및 임해형 신산업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산업분산 수용 및 산업지대간 연계·협력체계 강화 ○ 국제교류 및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철도·도로망의 입체적 구축 및 자유무역지대 조성
행정도시·도청 이전지 개 발 축 (중 부 축)	행정도시·홍성·예산 (행정도시·공주·청양·홍성·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도시와 홍성·예산의 도청 이전지로 연계되는 행정기능 중심과 해양과 내륙의 문화·관광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권과 중부내륙 문화관광권 연계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내륙간 물류거점 연계, 해양산업과 농림업 연계 육성
남 부 축	서천·대전 (서천·부여·논산·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정보산업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의 과학기술과 연계한 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 임해산업·해양물류 거점과 과학기술도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신항·자유무역지대와 대전·근교지역의 기술·물류 연계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이전지와 접근성 강화, 국제적 교역·교류 거점 및 해양관광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북한과의 교역·교류 및 서해안관광벨트의 중핵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연안환경 연구·관리 및 미래형 해양산업 거점
중 부 내륙 축	당진·부여 (당진·예산·청양·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역사문화관광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내포문화권 연계 역사·문화 관광벨트 형성 ○ 첨단농림업 연구·생산 중심지 및 녹색관광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테크노파크 중심의 첨단녹색산업 육성 및 차령산맥 일대의 녹색·생태관광지 조성
행정도시 남 북 축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천안·행정도시·대전·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도시 배후기능 수행을 위한 물류·교통중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 ICD, 천안 지역거점유통단지, 금산 지역특산물유통단지 및 고규격 기간교통망의 입체적 구축 ○ 내륙도시형 첨단산업 집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청주간 첨단산업벨트 연계 첨단산업군집 형성



[그림 9] 발전축 설정도

- 이러한 발전축별 특화기능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 산업 육성과 혁신체계 구축함
- 천안·아산지역을 국내 전자·정보기기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서산·당진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천안지역의 R&D기능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백제·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권 형성기반을 조성하고 서해안과 백제·내포문화권을 연계하는 자연·역사문화·산업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며,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하여 테마관광자원을 정비·복원함

V. 충남 발전방향을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충남도의 발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교통망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충남도 발전 전략과 연계하도록 동서간 연계성을 강화, 국내 교류중심지로서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선망 확충, 산업개발 촉진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교역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개발로 설정함

1.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남도내 남북3축과 동서3축 및 X축이 교차하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함
 -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서해안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남북지역간 연계성 강화
 - 「당진-울진」 자동차전용도로, 「보령-공주」 고속도로, 「서천-논산-대전」 고속화도로 건설로 주요 항만과 내륙 거점을 연결
 -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주도할 X축의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신설

<표 3> 축별 광역교통망의 노선명 및 주요경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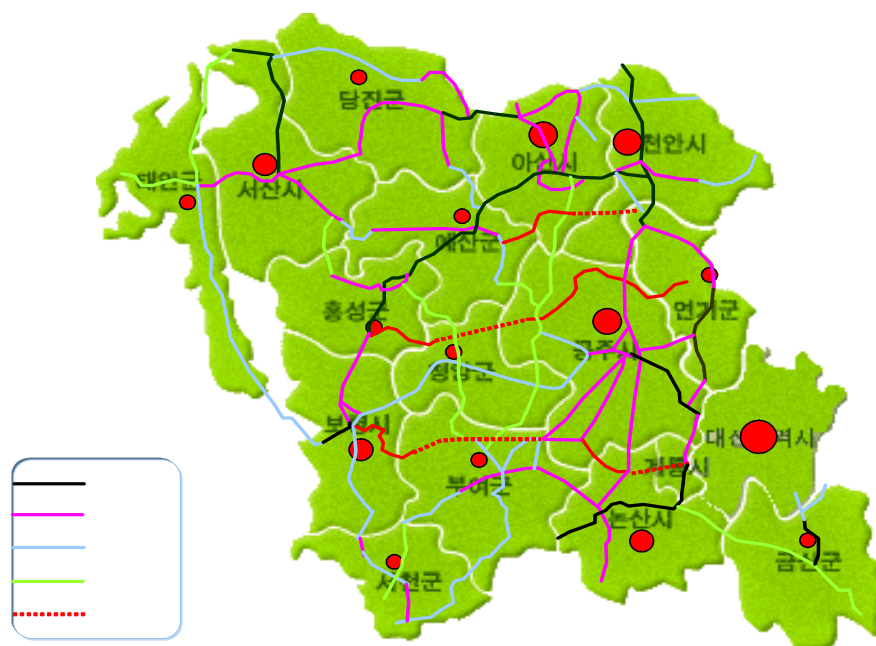
구 분	노 선 명	주 요 경 유 지
남북축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경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천안, 공주, 논산 천안, 연기, 대전, 금산
동서축	「당진-울진」간 자동차전용도로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서천-대전」간 고속화도로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보령, 청양, 공주 서천, 논산, 대전
X 축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당진, 예산, 공주, 대전 서천, 부여, 공주



[그림 10] 고속도로확충 구상도

2. 지역간선도로망 구축방안

- 지역간선도로망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 1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 일반지방도 36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 연장 및 확·포장사업 추진
- 공주, 보령, 아산, 천안, 서산, 논산 등의 시급도시 및 주요 읍·면급 도시들의 도시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20개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
- 서해안관광산업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보령~안면도」 및 「서산~대산~태안 이원」간 연육교를 가설하고, 금강변산업관광도로 등의 조기 건설로 산업·관광부문의 활성화 촉진



[그림 11] 일반도로확충 계획도

3. 철도망 구축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도내 전역이 철도로 연결되는 3×3의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 개발 촉진함
- 정부 및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로 전국적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축하고,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간 산업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동서산업철도」 및 「보령~조치원철도」, 「서남선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
- 경부선(천안-조치원-대전), 호남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장항) 등 기존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표 4> 축별 철도망의 노선명 및 주요경유지

구 분	노 선 명	주 요 경 유 지
합 계	6개 노선	
남북축	서남·장항선	당진, 예산, 홍성, 보령, 서천
	호남고속철도	천안, 공주, 논산
	경 부 선	천안, 연기, 대전
동서축	동서산업선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보령-조치원철도	보령, 청양, 공주, 조치원
	금 강 선	서천, 부여, 논산

[그림 12] 철도망 확충 구상도

4. 항만 구축방안

-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을 지원할 교역 전진기지로서 대산항, 보령신항, 장군신항, 장항항, 당진항(아산항) 등 5개 무역항과 대천항, 비인항, 안흥항 등 3개 연안항을 확충함
- 보령신항의 대북·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화 및 광역적 크루즈·여객항 기능을 확충하며, 이를 위하여 「보령~안면도」간 연육교를 건설하고, 중국행 정기여객선을 취항함
- 당진·대산항, 장군신항 등의 배후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하여 수도권항의 1차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중국과의 산업교역 중심항으로 개발하고,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거점화
- 항만은 수송·물류·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로 개발하며, 항만과 배후지역간의 철도, 고속도로 등의 연계수송망 구축 및 컨테이너기지, 종합물류단지 등을 건설

[그림 13] 항만배치 구상도

VI. 결론

- 본 원고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주·연기 지역 건설,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지역 이전지 결정 등 최근의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책사업 들이 충남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망 체계를 구상하였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의 홍성·예산 이전으로 충남도는 행정도시-공주-청양-홍성·예산의 중부내륙축과 천안-행정도시-대전-금산으로 연계되는 동부축의 위상과 개발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개발축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통망 체계의 구축방안으로서 먼저,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당진-울진간, 서천-영덕간 고속도로 등 국토의 동서간 연계성과 대천-서천간 고속화 도로, 태안반도의 고속교통망 접근성 제고와 국도 77호선의 연계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철도망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충남도내 정차역이 입지하여야 하며, 일반철도의 경우 충청선 철도(보령-청양-공주-행정도시-조치원), 서해안 철도(야목-안중-예산)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 전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권역거점 및 지역항만의 확충으로 대중국 교역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당진항 등 5개 무역항과 대천항 등 3개 연안항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앞에서 언급된 향후 충남도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단위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비롯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I. 서론

- 지난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되었고, 큰 틀에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 앞으로 2030년까지 진행될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면해 온 수도권 일극집중의 폐해를 불식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당사자 입장에 있는 충청권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주민으로서 중앙정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여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청권으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이념과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스스로 국토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관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하여 충청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일원이 체계적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사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과정을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4년 동안 진행될 건설단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조성사업, 정부공공청사와 도로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행정중심복합도

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주민입주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최종목표 년도인 2030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와 건설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히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중추기관이 상당수 입지하는 만큼 신도시의 규모는 더 크게 잡아야 하지만, 인구 50만의 중급도시 규모를 선택한 것은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분업,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충청지역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자족성 방안을 살펴보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함

II.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는 다음 4가지를 지향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는 기본적으로 자족도시를 지향하되 충청권의 주변 도시(대전, 천안, 청주, 공주 등)들과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표인구는 50만(2030년)이나, 이 인구의 충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단계별로 인구 증가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단계의 구분은 초기단계(~2011), 정책적 성숙단계(2012~2015),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 완성단계(2021~2030) 등으로 구분한다. 초기에는 정책적 추진력에 의하여 완성단계로 갈수록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하여 인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 50만명의 구성을 보면 수도권 유입인구 30만, 충청권유입인구 10만, 비수도비충청권 유입인구 10만 명으로 가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책적 추진력에 의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종사자 및 가족, 연관산업 등)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완성기에는 비수도권 및 비충청권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Ⅲ.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방안

- 지난 2006년 2월9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즉 위계별로 보면 지역적 기능(Regional Net)으로 충청권 광역 중심도시 기능, 국토적 기능(National Net)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수용, 국제적 기능(Global Net)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글로벌 기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두려고 하는 기능으로 광역유통, 대학·대학원, 문화·미디어, 중추행정,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문화관광 등을 제안하고 있다<표 1>.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의 이해 없이 진행된다면 신도시 도입기능이 주변도시 기능과 상충되어 주변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규모의 기능이 설정되지 않으면 효율성 확보가 어렵거나 신도시로의 기능적 흡수로 인한 주변도시의 공동화가 야기될 수도 있음

<표 1> 자족기능의 유형화

위계별 유형	내용	도입기능 (예)	
지역적기능 Regional Net	충청권 광역중심 도시기능	광역유통	고급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학,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원
		문화, 미디어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방송국 등,
국토적기능 National Net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기능 수용	중추행정	중앙행정청사
		첨단산업, 연구개발	첨단산업연구단지
국제적기능 Global Net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글로벌기능	국제문화관광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

자료: 국토연구원 주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2006년 2월9일).

- 자족기능을 위한 기능별 업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제조업 기능으로서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으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 및 전지 변화 장치,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산업용지로 약 25~35만평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예상 유발 고용은 17,0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에 충청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참여하고 분업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2> 유치 제조업종

업 종	선택 근거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사무,계산,회계용기계	차세대 성장동력 첨단 산업 도시입지 업종
기타전기기계및전지변화장치 (차세대전지)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산업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수요증대
영상음향통신장비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산업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을 리드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산업 충청권 IT, BT 와 연계

자료: 국토연구원 주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2006년 2월9일).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는 외국 행정도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수도권과 비교하여 충청권에 부족한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도 충청권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상호 보완관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오락(문화산업)을 선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약 6~10만평의 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문화산업 부지 포함), 예상 유발 고용인구는 약 70,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음

- 문화기능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한국을 상징하고 세계에 자랑할만한 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등 대형 문화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문화산업으로는 출판, 방송 등 행정기능과 관련 있거나 콘텐츠, 디자인 등 충청권 전략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산업을 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약 2~4만평, 예상 유발 고용인구로서 도시전체 인구의 1%인 5천명을 예상하고 있음
- 국제교류 기능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도시가 되기 위해, 또 충청권에 가장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교류 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교류 부지로 호텔, 쇼핑 등 관련 상업시설 포함하여 약 5만평을 상정하고 있고 컨벤션과 전시장만 고려시에는 약 1만평을 예상하고 있다. 문화 및 국제 교류 기능의 유치 전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교류 기능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공의 적극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의 선도투자를 통해 한국 대표시설 및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역량 참여와 향후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민자유치 사업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교육, 연구 기능으로 종합대학교와 전문대학원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신도시가 혁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조기에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제 우수 종합대학교 1개소의 조기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 대안으로는 ①새로운 대학의 신설, ②충청권 대학의 이전, ③수도권 대학의 이전 등을 상정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 있고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부지 공급 가격 등 인센티브 여부가 유치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착할 행정 기능의 교육 연구 측면을 지원할 관련 전문대학원이

나 대학원대학의 유치도 필요하고,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소 등과 교육 연구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합대학교 1개소 및 전문대학원 2개소 부지를 위해 약 15~30만평이 소요되고 유발 고용효과는 800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의료복지 기능으로는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선진 의료복지 시설과 아울러 선진 의료·복지 전달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 산업 측면에서도 의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선진 의료·복지 시설 및 산업을 첨단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산업을 한데 묶은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클러스터, 의료실버타운단지 등 약 10~30만평이 소요되고, 관련 유발 고용효과는 약 1만 3천명을 예상하고 있음
- 상업업무 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충청권 거점 및 국제교류 기능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지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호텔, 고급백화점, 쇼핑몰 등 고급광역상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등 국제교류시설이 입주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업업무용지 전체 수요는 약 48만평으로 예상되고, 이 중 충청권 거점 역할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 용지는 약 8~12만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중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주할 경우 주변 지역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리라 보며 주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IV.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주변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강병주 (2005)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국가의 중심지역이 되고, 다음으로 인구가 유입하면서 현재의 농업 및 제조업 중심에서 수도권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게 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증대, 교육의 질적 개선,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변화되는 충청권의 위상변화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강병주, 2005)

1. 국가의 행정기능 중심지역으로써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대전 및 인근지역은 국가 중추행정기능의 강화로 인한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어 주변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교육, 문화, 오락, 주거기능을 지원할 것이며, 청주는 바이오 제품 및 항공산업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천안은 반도체, 영상,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공주는 백제의 고도로써 전통을 보존하면서 도시개편이 진행되어 문화■휴양도시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는 위성도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논산, 예산 등은 광대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농산물을 비롯하여 1차 산업 상품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주변의 대전, 청주, 천안과 더불어 광역·연계형으로 발전하여 현재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여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의정부 등이 연계형태로 발전된 현재 수도권과 비슷한 하나의 축소판이 만들어질 것임

2.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함으로써 발생될 산업구조의 변화로는 농업부문에서는 도시형 농업 및 상업적 농업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업은 고부가가치형 첨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상업은 소비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개별 상업주체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행정수도의 회의■컨벤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업, 그리고 행정도시에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여가 및 유흥서비스업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 농촌지역은 1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신규산업이 창출되고, 그로 인한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임

3. 교육의 질적 개선

-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충청지역은 교육 부문에서 질적·양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의 인구유입 동기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인 바, 한 조사에 의하면 수능 5% 이내 학생의 62%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의 85%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인지라,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각종 교육기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어질 것이다. 그 결과 충청권 전체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충청권 주민이 자녀교육을 위해 현재의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방은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어 오늘날처럼 인구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학이 새로이 입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도시에 입지한 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여건개선은 충청권의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외부지역으로부터 우수한 학생의 유치가 가능해지게 될

4.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결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인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도로, 교통, 통신, 유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규모로 확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으로 주민의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현재의 주민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은 물론이고, 장래의 수요도 조사하여 시설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청권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도시생활 편의시설이 제공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최첨단 복지 및 후생시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등이 확충되고, 이들 시설들이 지역 내에 적절히 배치되고,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민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복지■후생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V. 충청권 지역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및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광역계획권 지정을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역 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충청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난 2005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결정하였다. 광역권 설정원칙으로는 광역권의 공간적 규모와 영향권, 광역도시계획 본래 취지에의 부합성, 3개 시·도간 공간 규모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등 5개 이고, 군 지역은 연기군,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등 5개 군임
- 우선 충청권의 인구를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충청권 인구는 약 484만명 수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2020년이 되면 약 44만명이 증가한 5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2030년까지는 인구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청권 인구 중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안, 청주, 대전시의 인구가 246만명으로 충청권 전체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상당부분을 이들 3개 도시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접지역인 공주시, 계룡시, 청원군, 연기군 등에서 인구증가가 현저하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산업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진입이 어려운 민간 사업체의 경우 주변지역에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인구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반경 30km 권역 내에서 현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는 50만 명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광역권 인구는 예상보다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표 3> 충청권 인구추이 전망

지 역	인 구(천명)			
	2000	2010	2020	2030
충청권	4,678.4	5,110.9	5,280.2	5,285.7
충청북도	1,466.1	1,562.0	1,583.5	1,563.0
충청남도	1,884.8	1,944.4	1,938.8	1,882.5
대전광역시	1,367.4	1,604.6	1,758.0	1,840.1
청주시	587.1	711.4	773.9	792.7
천안시	418.1	556.3	641.8	683.8
공주시	130.5	127.5	118.2	107.3
계룡시	27.0	38.0	45.1	48.8
청원군	115.6	172.3	198.3	214.3
연기군	80.0	79.0	73.5	66.6
진천군	57.6	62.4	65.8	68.3
증평균	29.3	26.2	22.5	19.1

자료 : 통계청(2003),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 65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2030년의 충청권 전체인구는 약 59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전, 청주,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1 대도시, 2 중도시의 충청권의 중심지체계는 계획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가됨으로써 1 대도시, 3 중도시의 공간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심도시별 성격과 기능분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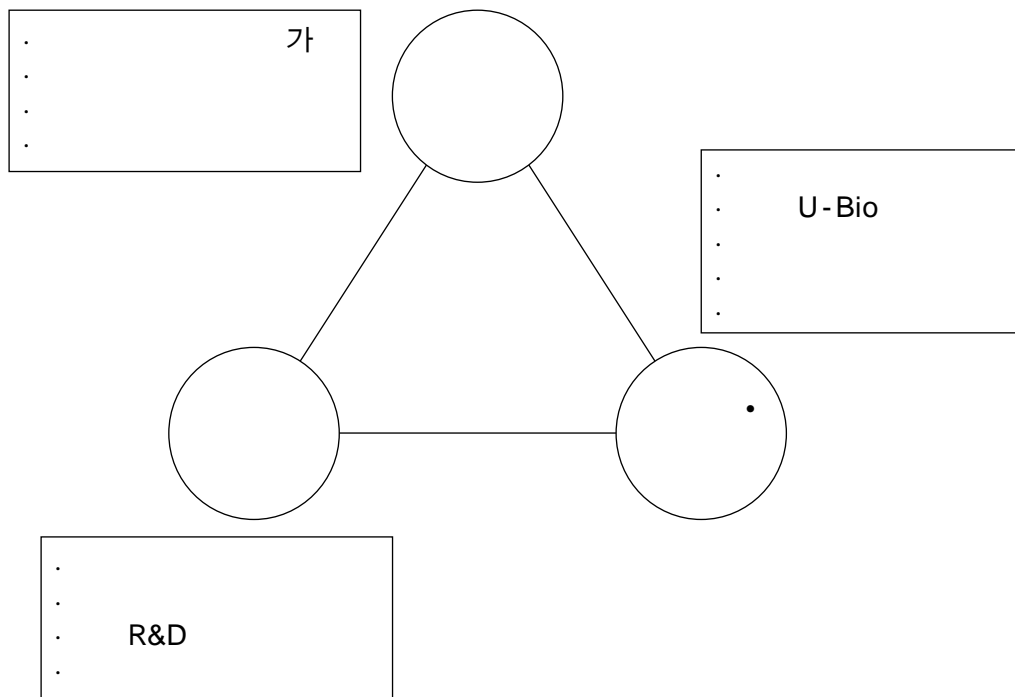
- 광역계획권으로 설정된 9개 시·군에 대하여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도시지표(시 지역)

구 분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면적(km ²)	539.64	153.32	636.45	940.90	60.68
인구(명)	1,438,778	606,305	445,485	133,012	31,430
가 구	479,916	201,444	151,536	45,146	10,165
대 학	16	4	11	3	-
종합병원	8	5	4	1	-
국가공단	대덕밸리	-	천안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	-
국보·보물	4	10	14	35	-
유통단지	2	-	1	-	-
호텔(특급)	3	건설중	-	-	-

<표 5> 도시지표(군 지역)

구 분	연기군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면적(km ²)	361.44	814.4	81.9	406.13
인구(명)	83,814	121,235	31,541	59,724
가 구	30,236	43,159	10,324	21,724
대 학	3	4	1	-
종합병원	3	-	-	-
국가공단	-	오송생명과학단지	-	-
국보·보물	2	4	-	1
유통단지	-	중부내륙화물기지	-	-
호텔(특급)	-	-	-	-



[그림 1] 주변도시 산업 연계도

자 료 : 이경기(2005), 주변도시 발전구상.

Ⅵ. 충남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 방안과 네트워크 방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효과를 지역발전에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이념과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스스로 국토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관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주변지역이 상호 보완적이고 분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충청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계획을 마련해야 함

2.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 법률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 범위와 명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여야가 진행시키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 때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부여를 논하게 될 때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큼
- 특히 연기군과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및 범위를 설정할 때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이 때 대응 가능한 논리를 미리 개발해 놓아야만 한다. 몇 가지 예상되는 대안으로, ①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정지」와 「주변

지역」만을 가지고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②연기군 및 공주시를 통합하여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③광역권 전체를 특정시로 만드는 방안, ④기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때 연기군 및 공주시 그리고 주변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임

- ①안으로 된다면 연기군의 많은 부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되어 군세가 매우 약해지게 됨으로써 존립기반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천안시, 청원군, 공주시 등의 인접지역에 분산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②안으로 된다면 공주시와 같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읍이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③안과 같이 된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새로운 매머드 도시가 발생하게 된다. ④안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3. 광역계획권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 도시로 하는 광역도시권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주변의 시·읍·면급 도시지역의 기존 시가지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으로 무질서한 건축과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된다. 광역계획권내의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정비방향을 중심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주변 지역과 같이 이용하거나 연계되는 광역 차원의 도시 시설로 도로 등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 자연공원, 유원지 등의 공원위락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 단계에 있거나 건설과정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도시 및 읍·면을 정비하거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개발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시가지개발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기능으로 광역유통, 대학·대학원, 문화·미디어, 중추행정,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문화관광 등이 제안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의 이해 없이 진행된다면 신도시 도입기능이 주변도시 기능과 상충되어 주변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규모의 기능이 설정되지 않으면 효율성 확보가 어렵거나 신도시로의 기능적 흡수로 인한 주변도시의 공동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새로운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고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음

5.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광역중심 상업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충청권 거점 및 국제교류 기능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지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호텔, 고급백화점, 쇼펩몰 등 고급광역상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등 국제교류시설이 입주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중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주할 경우 주변 지역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리라 보며 주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업 환경을 가진 주변지역 특히 중소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업시설 규모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주변지역 시장의 현대화와 전문화를 시급히 진행시켜야 할 것임

6.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변지역 대학의 참여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중 교육, 연구 기능을 높이는 데에 주변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선 교육 및 연구 기능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려는 데에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에 주변지역의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한 우수학생 유치는 연구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으로 우수 인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2의 강남」 또는 교육 특구가 되어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50만 이상의 인구 집중이 일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주대학과 충남대학의 통합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통합대학 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 대학 명칭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또는 유사한 지명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전문대학원 또한 통합대학에서 대학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개방형 대학원을 지향하여 전국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7. 충청권내 중심 도시간 네트워크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청권내 중심도시간 기능 및 시설분담, 소도시와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기능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전략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이 때 도시네트워크이론(City Network Theory)을 적용하여 도시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박재길 · 이왕건, 2004).
- 네트워크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시장규모가 크고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에너지의 낭비적 사용과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집적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규모 도시는 환경적 악영향이 낮고, 이동성이 높으며, 주민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규모와 인적 자원공급의 한계로 고차적 기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규모 도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중규모 도시의 규모와 중심성 취약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사 규모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대도시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충청권 도시들의 도시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우선 중심도시간 기능 전문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중심도시들의 산업별 특성과 미래의 전략산업을 감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화기능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들 간에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주변도시의 전문화와 네트워킹

- 주변지역의 전문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네트워킹은 자연 · 인문적 조건과 지역 특화 전략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

업연구원과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은 2004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첨단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첨단운송장비, 정밀기기), 첨단문화산업(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농·축산바이오(첨단작물, 첨단축산, 생물), 관광산업(생태체험, 건강·휴양)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음

-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은 수도권으로부터 분산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구와 산업을 부분적으로 유치하기에 최적의 위치이다. 이미 천안은 현재 충청권 북부지역의 산업, 교육중심지로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권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금속기계업종 이외에도 충남도 주력 산업인 영상, 반도체, 정보통신업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첨단화·다원화시켜야 할 것임
- 공주시는 교육·문화 산업, 관광·레저 산업,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전원형 주택 산업 등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을 활용한 수상 레저 산업을 개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광역시민의 레저 공간으로 서비스 할 수도 있음
- 계룡시는 국방 및 방위산업, 전원형 주택 산업을 전문화하고, 연기군은 물류산업,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신기술·첨단벤처산업, 오락·유흥 산업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곳에서 멀지 않은 부여군, 논산군, 금산군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방안이 필요하다. 부여는 백제역사·문화의 전통보전과 재현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청정농업을 전문화하고, 논산은 국방, 레저, 녹색관광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금산은 국제인삼물류센터 등 인삼약초 관련 산업 및 청정농업, 산촌·전원형 주거, 산악형 관광 산업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

<표 6> 주변지역 산업전문화 방안

도시명	전문화 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추정치·행정 ○ 교육, 연구 산업 ○ 첨단기업 투자지원시설 ○ 인쇄, 음향, 정보 산업 ○ 문화산업 및 의료·복지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및 연구(대학, 연구) ○ 정치·행정(제3청사), 국방 ○ 첨단산업 및 금융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통신관련 IT(산업) ○ 보건·의료·제약 등 BT(산업) ○ 항공산업, 음식료업, 인쇄출판업(산업) ○ 물류, 국제업무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산업 ○ 관광·레저 산업 ○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 ○ 전원형 주택 산업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방위산업 ○ 전원형 주택 산업
연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 중부권내륙화물기지 ○ 신기술·첨단벤처산업 ○ 오락·유흥 산업

9. 환경 및 네트워크 산업 공동 대응

- 금강 중류지역에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금강 하천의 오염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류 지역인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상수도 시설 용량을 늘리

고 배수관을 확보하는 등 네트워크형 시설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 열병합 발전 등 지역발전소 건설, 도시가스, 전력 등의 문제 등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네트워킹을 위한 과제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체제 확립(지자체간 협약, 조례제정, 위원회, 협의체 구성, 관련 지자체 및 실과 전담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계획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새로운 주변도시 기능 분담사업 발굴(이주자 택지 개발 사업, 휴양·레저·스포츠·오락 산업, 웰빙·건강산업 등)
- 제3차 충남 종합계획 수정
- 각 시군 도시계획 수정

참 고 문 헌

- 강병주(2003),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심포지움.
- 강병주(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대전의 지역혁신 전략.
- 강현수(2003), “지역혁신체계와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국가균형발전추진단.
- 건설교통부 등(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 권용우(2004.12),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리학연구」 38(4), 한국지리교육학회.
- 권용우(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상생적 국토균형발전 전략, 제1차 신행정수도 포럼.
- 공주대학교(2003), 행정수도 이전 대책연구.
- 대전발전연구원 주최, 신행정도시의 지속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대전의 발전방안 정책세미나(2005. 3)
- 이경기·권용우(200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지리학연구」 38(3), 한국지리교육학회.
- 이창기(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대전의 위상, 신행정수도 포럼.
- 전명진·허재완(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발제 논문」, 국토연구원.
- 정환영(2004),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디트뉴스 심포지엄.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략 세미나, 충북개발연구원 주관(2005. 4. 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홈페이지

(<http://www.macc.go.kr/>)